



유럽 그린딜과 Covid-19 이후의 경제 회복

**앤-샬롯 브루노빌,
유럽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국장**

**엘리나 바르드람,
유럽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 국제협력국장**



”

**“ 유럽 그린딜은 우리의
신성장전략입니다.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EUGreenDeal



**European
Commission**

1 | 그린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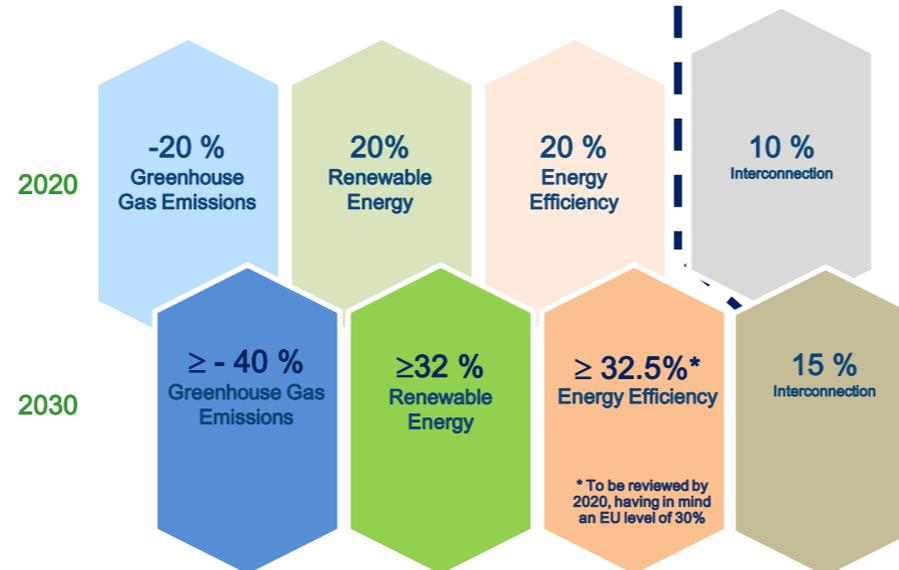
배경



PARIS2015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CM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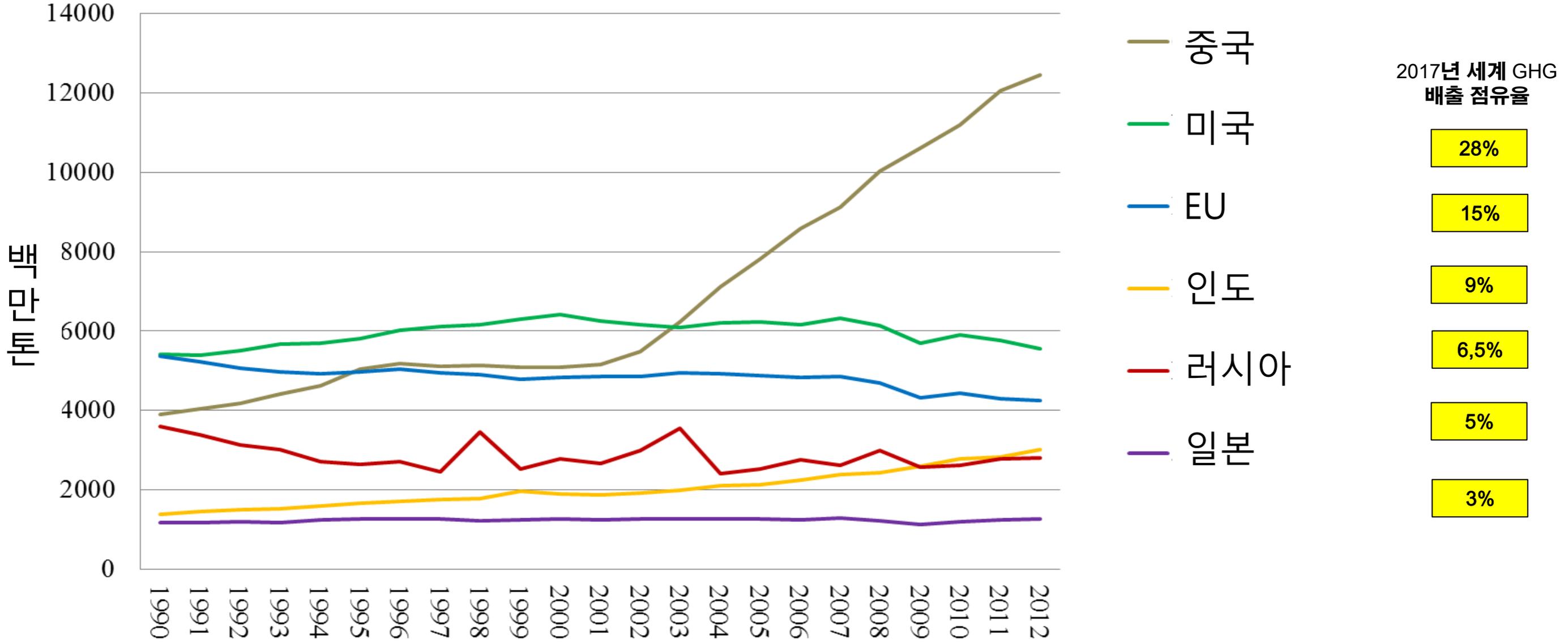
파리협정

EU NDC - 2030 목표



탄소중립사회를 향하여

배출량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 저장원)



Source: Historical emissions data: inventories data to the UNFCCC emissions with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for China and India data from EDGAR, all GHG emission, all sources and sinks, excl. forest and peat fires

1 | 그린딜

비전

-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유럽연합의 **신성장 전략**임.
- 그린딜은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유럽연합이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즉,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자연 자원의 보호, **경제성장이 자원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과 분리되어** 실현되는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린딜은 일자리의 창출, 경쟁력의 강화, 혁신의 활성화임.
- 그린딜은 유럽사업의 중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유럽 그린딜은 파리협정, 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EU 전략의 핵심요소임.

유럽 그린딜

심도 있는 전환 정책의 설계

유럽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

유럽
그린딜

모두를 위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

2030년과 2050년에 대한
EU의 기후 목표 강화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계의 변화

건물과 리모델링에 있어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화

“EU의 차세대”

독성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위한 오염 물질 배출 제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회복

농장에서 고기까지: 정의롭고,
건강하며, 친환경적인 식품 체계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연구 확대 및 혁신 장려

세계
리더로서의 EU

모든 EU의 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유럽 기후협약

2 | 그린딜

조율된 기후행동

2030년 및 2050년 EU의
기후목표 강화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한 EU의 '기후법'
- 2030년 EU의 기후목표를 최소 50%에서 55%까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플랜을 2020년10월까지 도출
- 6월까지 강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적 수단 검토 및 개정
- 2021년까지 지정된 업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 2020/2021년 새로운 EU의 기후변화적응 전략

세계
리더로서의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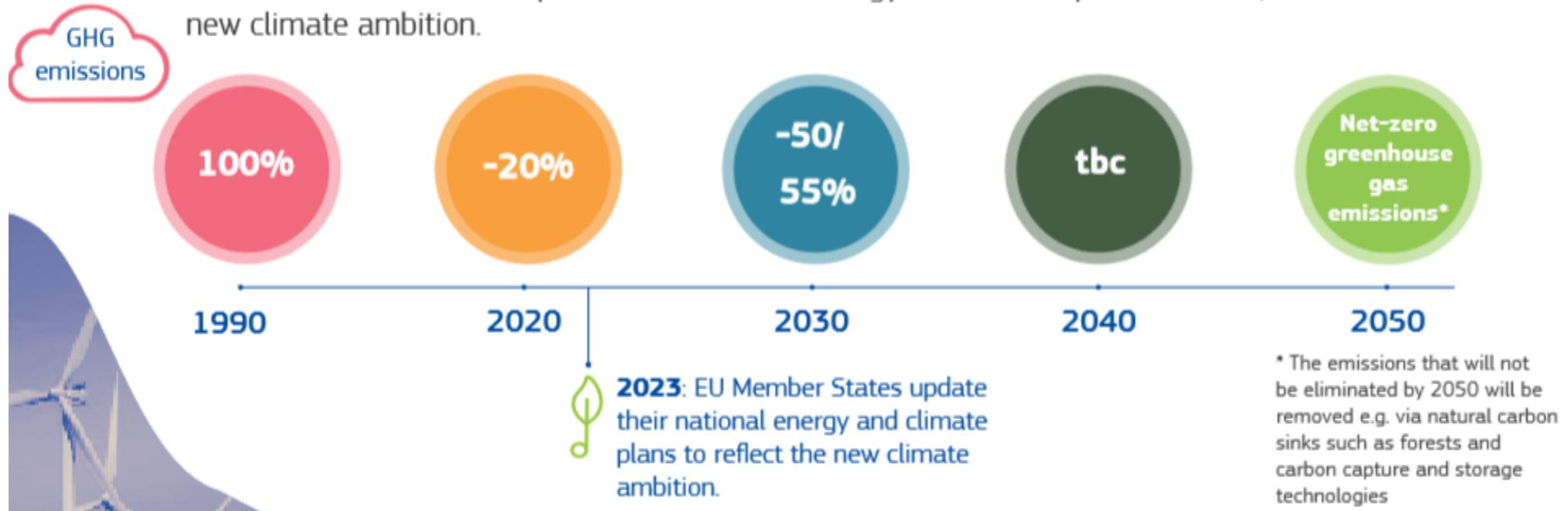
유럽
기후협약

3 | 그린딜

기후행동에 대한 목표 강화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make proposals to increase the EU's climate ambition for 2030.

Relevant energy legislation will be reviewed and where necessary revised by June 2021. EU Member States will then update their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in 2023, to reflect the new climate ambition.



4 | 유럽 기후법

왜 중요한가?

기후법은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함:

- 2050년에 탄소중립사회를 이루겠다는 결정은 되돌릴 수 없음
- 100일 이내에 행동을 개시하고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 투자자들에게 향후 30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신호 전달
- 파리협정의 이행에 유럽이 선도적으로 행동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조항을 법에 삽입;
- 규율과 투명성 조항;
- 2050년 경로 도출을 위한 제도 수립 조항;
-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대한 영향 평가 시 기후중립목표 반영;
- 기후변화적응 대책의 역할과 대중의 참여를 강조한 조항

5 | 그린딜을 통한 경제회복

경제위기의 국제적 규모: 주요 동향과 경제 영향

- 향후 2년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10조 유로 이상을 지출할 계획임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자원 소모적인 경기 회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국제 연대 및 다자주의가 필요 => 단기주의 – 잠금효과(Lock-in) – 좌초자산
- 녹색 경제로의 회복 아젠다는 이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실행됨
- COVID-19 이후의 경기 회복은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탄력적이고 기후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달성되어야 함. 반드시 “Do-no-harm”을 지켜야 함
- EU는 녹색경제회복모델을 이행할 청사진을 이미 완성하였음 – 유럽그린딜, 유럽의 성장 전략, 유럽 기후법과 동반한 산업 전략 및 순환 경제 계획,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 유럽의 디지털 및 데이터 전략을 수립함
- 경기회복 계획과 미래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 기회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빠르고 결단력 있게 나아감으로써, COVID-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임.

6 | 그린딜을 통한 경제회복

에너지 - 녹색 경제로의 회복을 위한 핵심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 2020년 6월까지 최종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의 목표 평가
- 2020년 7월까지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도출
- 2020년 7월까지 **EU의 청정수소전략** 도출
- 2020년 7월까지 2020년 8월까지 **건물 부문 리모델링 비율 2배로 확대**
- 2020년 8월에 **육상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발족
- 2021년 6월까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지침** 검토 및 개정
- **TEN-E 규정** 검토 (범유럽 네트워크 - 에너지규정)

건물과 리모델링에 있어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화

심도 있는 전환 정책의 설계

7 | 에너지 – 경제회복의 세 가지 우선과제

1. 에너지시스템의 통합과 수소

미래 에너지시스템

- 순환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
-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확대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전기생산 (운송수단, 난방, 일부 생산공정의 전기화)
- 탄소제로 연료를 통한 각 부문의 배출 제로 달성
-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 활용

7 | 에너지 – 경제회복의 세 가지 우선과제

2. 리노베이션 웨이브

건물 에너지 수요와 비용 저감 및 건물 분야 일자리 창출

- 건물부문은 EU 내 에너지사용량의 40%, 탄소배출량의 36%를 차지함
- 기존 법적 제도
 - 2018년에 개정된 건물에너지성능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 2018년에 개정된 에너지효율화지침
- 건물에너지효율화: 주택, 공공건물, 상업건물
-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

7 | 에너지 – 경제회복의 세 가지 우선과제

3. 육상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혁신 지원

- 기존 법적 제도
 - 재생에너지지침 (2018년 개정)
 -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최소 32%로 설정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선도적인 지위 (세계 특허권의 30% 보유)
- 육상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 EU의 산업 및 기술적 성공 사례
- 재생에너지 금융 제도

8 |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

- 석탄발전량: 전 세계 발전량의 40%
- 유럽연합(EU)의 경우 2005년 이래 석탄 발전량 27% 감소
- 2019년 3분기 무연탄과 갈탄 발전량이 2018년 3분기 대비 36% 감소
- 유럽연합(EU)의 17개 회원국, **석탄 발전 중단 결정**
-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의 기존 석탄 발전 용량의 48%가 단계적 퇴출 예정
 - **덴마크의 총 석탄 발전량 : 2010년 43.8%에서 2018년 21.6%로 감소**
 - **독일의 총 석탄 발전량 : 2010년 41.7% 에서 2018년 35.6%로 감소**
 - **그리스의 총 석탄 발전량 : 2010년 53.7% 에서 2018년 32.3%로 감소**

8 | 정의로운 전환

모두를 위한 전환 – 석탄지역 전환 플랫폼

- 어떤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청정 에너지 전환과 최소 1,000억 유로 지원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체계 (Just Transition Mechanism) 수립
 - 재정 지원
 - 전환 계획
 - 매력적인 조건
 - 기술적 지원
- 석탄지역 전환 플랫폼(Platform for Coal Regions in Transition)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석탄지역 간 지식 공유와 경험 교류를 촉진

9 | 유럽연합(EU)의 미래세대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와 준비

- 향후 7년 간 7,500억 유로 투자 (보조금 5,000억 유로 및 융자 2,500억 유로)
- 3개 주요 분야:
 1. 투자과 개혁을 위한 회원국 지원: 경제회복 및 복원력 지원 기금 5,600억 유로로 회원국 결속 강화, 재분배 및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해 기존 결속정책 프로그램에 550억 유로 증액, 정의로운 전환 기금 200억 유로 추가 지원
 2. 민간 투자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 위기 동안 기업지원을 위해 건전성 지원기구 310억 유로 제공, InvestEU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의 투자예산보증, 전략적 투자기금 150억 유로를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 우선 창출
 3. 위기에서 얻은 교훈: 94억 유로의 EU4Health 프로그램 마련으로 유럽연합(EU)의 회복력 강화, 165억 유로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 협력국 지원

9 | 경기회복 계획을 위한 수단

회원국들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고 복구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

수혜자	지역, 기업, 시민	기업	보건 분야	글로벌 파트너
	녹색전환과 디지털전환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복구 및 회복 기금 • REACT-EU (결속 정책) • 농촌 발전 지원 • 정의로운 전환 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 지원기구 • InvestEU 프로그램 강화 • 전략적 투자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Health 사업 강화 • Horizon Europe 사업 강화 • rescEU 사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활동보증 • 유럽 지속가능발전기금
개입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회원국	 유럽 투자 은행 & 기타 공공 재정 파트너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국제기구



녹색 경제 회복 수단 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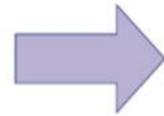
재량적 재정 정책	재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및 공공 지출의 변화 (예: 단기 세금 납부 연기) ○ 탄소 가격 책정, 에너지 및 환경 과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위기 이후의 낮은 화석 연료 가격을 완화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해소) ○ 재생에너지 옵션 지원 ○ 환경 목표를 저해하는 유해한 인센티브 저감 및 제거 ○ (기후 및 환경 행동을 위한 공공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국가 차원의 녹색 채권 발행 ○ 기후-스마트 예산 책정, 조달 및 공공 투자 의사결정: 투자 프로젝트의 기후 평가 및 기후 지출 태깅 (“녹색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및 환경 위험을 EU 의 건전성 프레임워크에 더욱 잘 통합하고, 녹색자산에 대한 기존의 자금 수요에 대한 적합성 평가 (분류 및 TCFD 조정 공시) ○ “합의되고 확립된 방법론”(분류법)을 사용하여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발자국 대출에 대한 자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담보기준 완화 ○ 유동성 지원/양적 완화 : 공공 유동성 공급, 보장 제도(단기 위험분담금 포함) ○ 신용

10 |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국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융수요를 재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전환을 추진 중인 모든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잠재력은 대부분 미개발된 상황임
- 국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고, 국가 및 지역적 배경을 감안하여 조정된 접근법을 개발
-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EU)은 2019년 10월 18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 케냐, 모로코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을 출범시켰음
-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 5개국이 IPSF에 가입함

회원국



45%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인구의

옵저버



10 | 녹색 전환을 위한 자원마련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

목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통합된 시장 촉진



전 세계에 걸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민간 자본의
유치 확대



-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보 교환 및 제공
-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비교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존재하는 **장벽과 기회**를 파악
- 국가 및 지역적 배경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적 조정 강화

활동의 주요 초점

- 녹색 분류 체계 (예.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분류)
- 투자자에게 일관성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한 녹색 금융 제품 표준 및 라벨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개



IPSF 란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포럼이다.

국가 및 지역적 배경을 존중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와 접근법을 상호 비교하고
조정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과 이니셔티브
(금융/경제, 중앙은행, 감독·규제당국)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포럼이다.



IPSF에 대한 오해

제도화된 기구가 아니며,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회원에게 어떠한 구속력, 법적, 재정적
의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지 않으며,
회원국에게 타 회원국이 수립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규칙이나 접근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다루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민간 기업**을 위한
포럼이 아니다.

11 | 국제협력

유럽연합의 노력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파리 협정 및 2030 의제 관련한 다자간 협력 체계에서 녹색경제회복 관철
- COP26 개최 전 더욱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 제시
-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차지
 - 청정에너지 전환의 장기적 목표와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 지원
 -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유연하고,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시장의 활성화 선언
 - 에너지 효율 개선: 모든 국민에게 현대적이고, 저렴하며,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비효율적인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유럽연합(EU)은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 및 이후에 개최될 G20 회의와 P4G 등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대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12 |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중립 지향

중점 분야 - 한국과의 협력

• 에너지 시장 개혁

- ✓ 가격 신호, 경쟁, 투명성
- ✓ 에너지 효율을 우선과제로
- ✓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 ✓ 모든 에너지원과 기반 시설의 최적 조합

• **거시적 거버넌스와 일관성 있는 접근법** : 탈석탄, 예측 가능성, 녹색회복 조치와 연계된 그린 딜(Green Deal) 추진

• **녹색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 유치**

• **포용성 (전 사회적인 노력), 인식 제고, 정의로운 전환**



European
Commission

감사합니다